

# 禹의장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자율투표로” 결단 촉구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헌법에 담아야  
국회의원 양심 따라 투표시 개헌 가능  
국힘, 약속하고도 당론 반대 이해 불가”  
이정현 “정쟁 대상 안돼...자율투표해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광주를 찾아 국회의원 자율투표를 통한 정치권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데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보고드리고 힘을 얻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5·18과 부마민주항쟁을 국가 책무로 하는 개헌”이라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18정신은 우리나라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긴 민주항쟁”이라며 “5·18과 부마가 있었기에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내부를 둘러보며 도청에 박혀 있던 계엄군의 총탄 흔적을 보고 있다. /조영권 기자

그러면서 우 의장은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에도 “솔직히 약속해놓고 이제 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39년 만의 개헌을 앞두고

투표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의결 전망에 대해 “5월4-10일 사이에 의결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문한 옛 전남도청에서도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현장을 둘러보니 당시의 처절함과 처참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새겨져 있어 가슴이 먹먹하다”며 “윤상원 열사가 5월27일 새벽 이곳에서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킨 현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 의장은 “5·18이 있었기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교훈이 가능했고 국회가 즉각 움직여 비상계엄도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정신이 헌법에 그대로 새겨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이제야 39년 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보름 후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당당하게 새겨지는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우 의장과 함께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둘러봤다.

이와 관련, 이정현 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보다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이 따른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또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며 “표결은 자유롭게, 판단은 양심에 따라, 결론은 국민 통합으로, 역사를 헌법에 담는 일은 과거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가기 위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이연상 기자

## 광주 시민사회·혁신당 “중대선거구제 개편 정치개약”

혁신당 “거대양당 의석 싸움이 수단”  
시민사회 “위헌 소송·地選 가져분 신청”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광주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정치개약’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시도”라고 직격했다.

광주시당은 “거대 양당이 자행한 밀실 야합과 기득권 쟁탈에 대한 준엄한 정치적 항의로 개혁진보 4당이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며 “시민사회까지 나서 중대선거구 확대와 정치 다양성 보장을 요구했지만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광주 북구·남구 등 중대선거구 대상 지역에서 ‘패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해 3-4인 선거구에 4명을 모두 공천하겠다는 오만은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당은 ▲3-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 철회 ▲복수 후보 추천 금지 및 의석 독점 구조 차단 ▲소수정당 진입 보장 장치 마련 ▲시민사회 참여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정치제도 개편이 헌정 정치인의 세 과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

민사회 대응팀’은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비무함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개약을 단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적 대표성 실질화와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 확대는 병립형 14%의 야합으로 마무리했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 대응팀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도의회 간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헌적 선거구를 확대했다”며 “대표성 왜곡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위헌적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져분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은진·서형우 기자

## 민형배 ‘한국한식대’ 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21일 “한식 산업의 체계적 육성 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 세계는 K-컬처를 통해 한국을 만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음식이 있다”며 “한식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한식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으로 설립되며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게 된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지원 아래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한 한식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된 핵심 과제로 제시

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기준과 브랜드는 외부가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생산자인 전남광주가 한식의 기준을 만들고 산업과 인재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 강속영 교육감 예비후보, 3대 공약 발표

강속영 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제 개편과 돌봄, 교육 복지를 담은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21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형 5일 돌봄학교 운영 ▲전국 최초 5-4-3 학제 개편 ▲전남광주형 EBS설립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 안팎 어디서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실현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박선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